

대법원 2017도6913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등 사건

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이동원)은 피고인 이호진(前 태광그룹 회장), 태광산업(주)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등 사건에서, ① **피고인 이호진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**, 피고인 이호진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지를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·선고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, **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**하였고, ② **피고인 태광산업(주)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**하였음(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도 6913 판결)

1.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

▣ 사안의 내용

- 피고인 이호진은 태광그룹 회장으로 재직 중, 피고인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의 이른바 '무자료거래'를 통하여 총 421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[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), **이하 '업무상횡령 부분'**],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2005년도 내지 2007년도, 2009년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조세), 조세범 처벌법 위반, **이하 '조세포탈 부분'**] 등으로 공소제기 됨

- 이른바 ‘무자료거래’는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수율을 낮게 조작하거나 판매 가능한 제품을 불량품으로 폐기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는 거래임
- 피고인 태광산업은 피고인 이호진의 조세포탈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으로 공소제기 됨

■ 소송 경과

● 제1심

- ① 피고인 이호진 : 징역 4년 6월 및 벌금 20억 원
- ② 피고인 태광산업에 대하여 벌금 3억 원

● 환송 전 원심

- ① 피고인 이호진 :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억 원
- ② 피고인 태광산업 : 항소기각

● 환송심 : 유죄 부분 파기환송(피고인들)

- 섬유제품 무자료거래 관련 범행(업무상횡령, 조세포탈) 부분만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
- 나머지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함
- 무자료거래를 통한 횡령행위의 객체는 섬유제품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섬유제품으로 본 환송 전 원심판결에 횡령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

● 환송 후 원심

- ① 피고인 이호진 :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억 원
- ② 피고인 태광산업 : 항소기각
- 환송심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그 심판범위 중 섬유제품 무자료거래 관련 범행 부분에 대하여 새로 판단하는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

전 원심의 판단에 따름

- **[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무자료거래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]** 횡령의 대상을 섬유제품에서 섬유제품 판매대금으로, 횡령의 기수시점을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서 공범인 이선애(피고인 이호진의 어머니)가 판매대금을 교부받는 행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 ⇨ 섬유제품 거래가액을 섬유제품 판매대금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공소사실의 횡령액 중 환송 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섬유제품 거래가액 약 200억 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의 횡령액으로 인정함
 - **[조세포탈 부분]**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에 대하여 직권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포탈액으로 인정한 것 외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포탈액을 유죄로 인정함
-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함

2. 대법원의 판단

■ 사건의 쟁점

- **[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무자료거래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]**
 - 피고인 이호진에 대하여 무자료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행위로 인한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
- **[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]**
 - 피고인 이호진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'금융사지배구조법')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(이하 '적격성 심사대상')인지 여부를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 확정된 후 적격성 심사대상인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하여 따로 선고했어야 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임
 -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은,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조

세법 처벌법 및 ‘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이하 ‘적격성 유지요건’이라고 함)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-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,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■ 판결의 결과

- 피고인 이호진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, 이에 대하여 심리함 없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
- 위와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분리 선고를 구하는 상고이유 주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이호진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및 피고인 태광산업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

■ 판단의 근거

- **[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무자료거래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]** ⇨ 원심의 근거와 동일함
- **[조세포탈 부분]**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6조 제6항, 제1항에 따른 분리 심리·선고의 점을 제외하고는 원심의 근거와 동일함
- **[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파기사유]**
 -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, 제4항,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,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,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,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·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

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(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7도20611 판결 등 참조)

-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구 특가법위반(조세)의 점과 2005년도, 2006년도, 2007년도, 2009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인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함
- 피고인 이호진의 변호인이 환송 후 원심에서 제출한 변론요지서나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인 이호진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음
-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피고인 이호진이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확정 후 적격성 심사대상인 경우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,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·선고하여야 함
-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음
- 결국 원심판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

3. 판결의 의의

- 비자금 조성행위로 인한 횡령죄의 성립, 조세포탈 관련 쟁점들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,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분리 심리·선고를 하여야 함을 밝힌 사례임